

남 북 협 력 동 향

(2006.10.1~12.31)

■ 북개성공단 산업재해 증가 추세(10.4, 연합)

- 개성공단에서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 3명 등 43명의 사상자 발생
 -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며 산재도 증가
 - 그러나 개성공단 산재율은 올해 기준 0.18%로 국내 0.76%에 비해 낮은 수준

개성공단 연도별 사상자 추이

(단위 : 명)

	'04	'05	'06. 8월 현재
남한 근로자	5	8	5
북한 근로자	3	10	12
계	8	18	17

- 산재사고 발생시 남측 모기업 소속으로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으나, 개성공단내 법인이 직접 고용한 남측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기업주와 근로자간 협의로 해결
 - 북측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로 임금의 15%를 국가에 납부해 북측 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처리

■ 북한, 핵실험 강행(10.9, 조선중앙통신)

- 북한은 10.9 핵실험을 강행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“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, 과학적 계산에 의해 진행되어 방사능 유출이 전혀 없었다”고 보도

- 정부는 핵실험 장소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360m 높이 산 지하의 수평갱도로 잠정 판단

※ 북핵 관련 일지

- 1993. 3월 북한, 핵확산금지조약(NPT) 탈퇴 선언
- 1994. 10월 북한 - 미국, 제네바 합의(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2기 건설과 연 50만t 중유 지원)
- 2002. 12월 북한, 핵동결 해제 선언
- 2005. 2월 북한,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
- 2006. 7월 북한, 미사일 시험발사 및 유엔 안보리,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
- 2006. 10. 3 북한, 핵실험 강행의사 천명
- 2006. 10. 6 유엔 안보리,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
- 2006. 10. 9 북한, 핵실험 실시 발표

- S&P,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9일 북핵실험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,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핵실험 직후 동요하였으나 곧 안정세를 회복

■ 유엔 안보리, 대북 제재 결의(10.13, 연합)

- 유엔 안보리는 14일 오후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
- 결의안 주요 내용
 -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및 미사일 발사유예 공약 복귀 등을 요구
 - 회원국들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하고 전차, 전투기, 공격용헬기,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에 대한 북한과 거래를 금지
 - 북한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해 대북 교역 화물을 검색 가능토록 하고, 북한의 핵,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, 금융자산, 경제적 자원의 동결과 사용 금지
 -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'05.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

■ 북한, 남한에 금강산사업 지속 추진 요청(10.20 연합)

- 리철 주스위스 북한대사는 19일 115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이후 갖은 남북의원 회동에서 “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”해 줄 것을 요청
- 앞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사업에 대해 “북한 당국에 돈을 주는 사업으로 보인다”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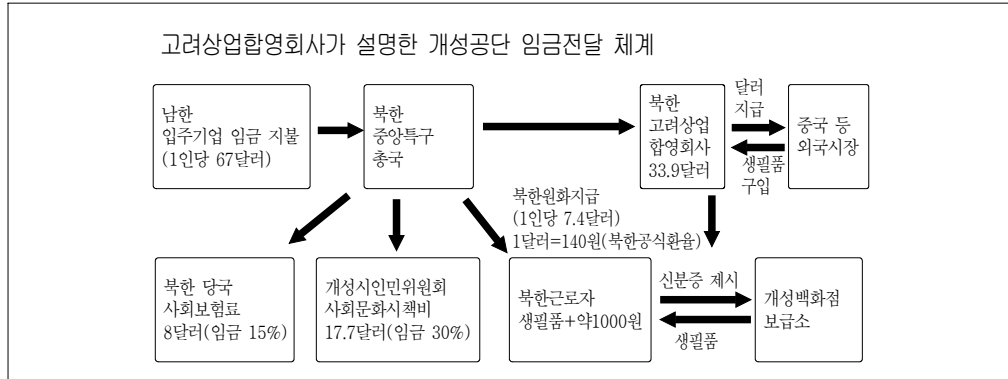
■ UN안보리, 대북 제재대상 목록 확정(11. 2, 연합)

-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1.1일 대북 제재대상 목록을 확정
- 이 목록은 북한의 생화학무기, 핵무기,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(WMD) 제조 방지를 목적으로 수백가지의 관련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, 핵공급그룹(NSG),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),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(AG)가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해 결정
- Peter Burian 제재위원회 의장(UN주재 슬로바키아 대사)은 앞으로 제재위원회가 자산동결 대상 단체, 여행제한 대상 개인, 금수 대상 사치품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
- ※ UN안보리는 10.14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 및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의결

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, 대부분 생필품으로 지급(11.7, 연합)

- 외국인 생필품을 수입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판매하는 고려상업합영회사*의 송용등 회장(한국계 호주인)은 개성공단 근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대부분 생필품으로 지급된다고 밝힘.
- * 고려상업합영회사 : 송용등 회장과 송악산 무역회사(개성시 인민위원회 산하)가 51대 49의 비율로 투자하여 '05. 1월에 설립
-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인 67달러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에 지급하면, 총국은 사회보험료(8달러), 문화시책비(17.7달러)를 제외한 33.9달러를 고려상업합영회사에 지급
- 이 자금으로 고려상업합영회사가 생필품을 수입하면 공단 근로자들은 총국에서 받은 구매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입

- 중국에서 고려상업합영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(약 7.4달러)는 근로자들에게 북한 원화(약1,000원)로 지급하되 이발, 목욕 비용 등으로 사용



■ 정부,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방안 발표(11.13, 연합뉴스)

- 정부는 11.13일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(10.14)와 관련한 이행방안을 발표
-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지속하기로 결정
- 주요 내용

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물적 규제 : '대북 반출·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'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■ 금융 규제 : 제재위원회가 규제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시행 예정 ■ 출입국 규제 : 필요시 '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'상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규제 실시 ■ 화물 검색 :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 강화, X선 투시기 등 장비·인력 보강
독자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쌀·비료 등 정부지원 대북지원 유보 ■ 금강산관광 체험학습 정부지원 중단 ■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 유보조치 지속
PS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

■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증가 추세(11.22,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)

- '06.11.21 (주)만선 등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기업이 345명을 신규채용함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수가 1만명(10,093명)을 돌파
 - 이 중 여성근로자가 80%이며, 남성은 20%
 -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(주)신원, (주)부천공업 등이 증축·증설을 통해 생산을 늘리고 본단지 1차 분양 입주기업들이 가동준비에 들어가며 인력수요가 꾸준히 증가
-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수 변화

(누계기준, 단위: 명)

'04.2월	'04.12월	'05.6월	'05.12월	'06.6월	'06.11월
42	1,657	3,657	6,025	7,871	10,093

■ 개성공단 방문 다시 증가(11.19, 연합뉴스)

- 북한 핵실험 이후 줄어들었던 투자시찰단의 개성공단 방문이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 지속 입장에 따라 다시 증가
- 11월중 개성공단 주요 방문
 - 3일 KOTRA주관 투자시찰단(70여명, 외국인 투자자 28명 포함)
 -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투자시찰단(80여명)
 - 8일 중소기업 투자시찰단(100여명)
 - 14일 동북아포럼(69명)
 - 15일 인천지역 투자시찰단(60여명)
 - 16일 독일 청년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독일 기업인(22명)

■ 투자시찰단, 개성공단 방문 증가(11.30, 통일부)

- 투자시찰 목적의 개성공단 방문자 수가 11월중 670명으로 미사일 발사(7.5) 이전 수준을 회복

○ 개성공단 방문 인원 현황

(단위: 명)

구 분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계
투 자 시 찰	591	146	590	462	380	670	2,839
정 부 기 관	50	-	3	2	-	-	55
언 론 계	50	-	-	-	25	18	93
해 외 인 사	116	-	15	19	14	60	224
기 타	607	36	-	4	46	143	836
계	1,414	182	608	487	465	891	4,047

■ 북측근로자 대상 회계교육 실시(11.30,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)

- 관리위원회는 11월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북측근로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
 - 금번 교육에는 21개 입주기업, 30명의 북측근로자가 참가했으며, 관리위에 따르면 내년 부터는 년 2회 정기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.

■ 대북 위탁가공업체 대상 설문조사(11.30, 중소기업진흥공단)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은 9-10월 기간 의류임가공 등 대북 위탁가공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수행현황을 조사
 -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0.6%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향후에도 현재 수준 이상의 위탁가공사업 추진의사를 밝힘.
 - 또한 응답업체의 91.9%가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내수로 판매하고 있어 원산지 인정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음.
 - 애로사항은 '기술지도 등 품질관리'(32.4%), '통행, 통신 불편'(23.5%) 등이고,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'통신환경 개선, 출입 및 통관절차 간소화'(37.5%)와 '물류 인프라 구축'(23.2%) 등
 - 위탁가공업체의 북측 현지 공장 위치는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평양(66.7%)이 가장 많고, 업종은 노동집약형 섬유, 봉제업(83.8%)이 가장 많음.

■ KEDO - 한전, 경수로사업 종결협약 체결(12.14, 통일부)

- 12.7~8일 뉴욕에서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결의('06. 5. 31)와 관련, KEDO - 한전간 종결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청산의 원칙과 일정 등을 확정
- 경수로사업 종결협약(TA; Termination Agreement) 주요 내용
 - 종결협약은 KEDO와 한전간의 모든 합의(공사계약 등)를 대체
 - KEDO는 북한 영역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(695만불)를 한전에 양도하고 협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
 - * 미지급 유지관리 비용 : '05.8~11월 현장유지관리비, 13.6백만불
 - 한전은 클레임 청구권(100백만불)과 KEDO의 미지급 비용에 대한 청구권(62백만불)을 포기
 - 기자재 활용결과, 한전의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시엔 향후 합의

■ 제5차 6자회담 결과(12.23, 연합)

- 남북한과 미국,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(12.18~22, 베이징)의 의장성명을 발표
 - 각국은 금번 회담을 통해 “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고, 9·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고, 가장 빠른 기회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함.”
- 금번 회담에서 미국은 핵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,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(BDA)의 자금 동결 등 금융제재의 선해제를 요구

■ 2006년 개성공단 생산액, 근로자 수 급증(12.22, 연합)

- 올해 개성공단 가동기업 및 근로자는 전년대비 2배, 생산액은 3배증가

○ 주요 지표

	2005년	2006년
연 간 생 산 액	1,491만달러	5,330만달러(예상)
월 생 산 액 (11월 기준)	294만달러	887만달러
가 동 기 업 수	10개	18개 (시범단지 15, 본단지 3)
북 측 근 로 자 수 (누계, 11월말 기준)	5,719명	10,093명
남 측 근 로 자 수 (누계, 11월말 기준)	542명	860명

■ 2006년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 발표(12.22, 농촌진흥청)

- 북한의 2006년 곡물 총 생산량은 7월 수해 등으로 전년 대비 1.3% 감소한 448만톤으로 추정
- 2006년 북한의 곡물생산 추정량

구 분	계	쌀	옥수수	맥류	두류	잡곡	서류
재배면적(천ha)	1,610	586	526	137	135	25	201
수량(kg/10a)	-	323	333	153	114	74	314
'06 생산량(만톤)	448	189	175	21	16	2	45
'05 생산량(만톤)	454	202	163	23	17	2	47
생산량 증감	△6	△13	12	△2	△1	0	△2

■ '07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(12.27)

- '07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이 12.27일 국회 의결로 확정
- 기금 조성 및 사용계획

(단위: 억원)

조 성		사 용	
정 부 출 연 금	5,000	사 업 비	8,704
공 자 기 금 예 수 금	6,819	· 대 출	3,371
예 탁 금 회 수	600	· 무 상 사 업	5,333
예비자금 회수 등	4,485	기 금 관 리 비	19
		공자원리금 상환	6,634
		예 비 자 금	1,547
계	16,904	계	16,904

- 국회 의결과정에서 기금 조성액이 정부안 대비 1,460억원 삭감